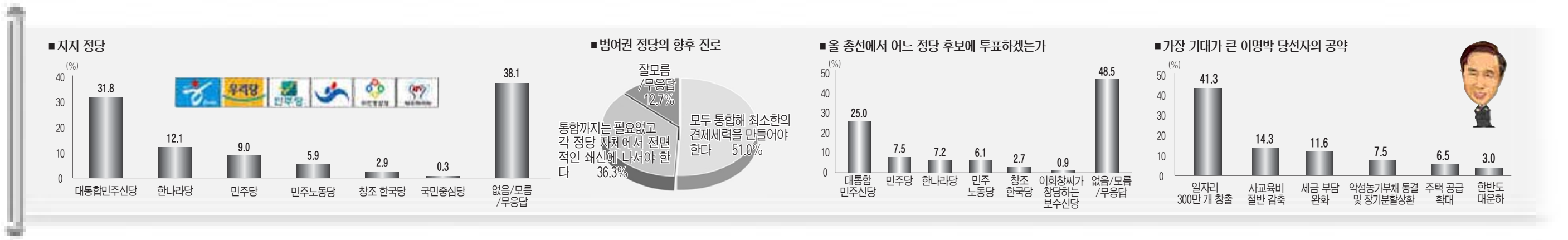


광주·전남주민 의식조사

광주일보는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아 오는 4월 9일 치러질 18대 총선에 대한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표심과 이명박 차기 대통령 당선자 및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비롯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주민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구립 22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올 4월 총선엔 지역 국회의원 물갈이” 56%

18대 총선 기상도

내년 4월 9일 치러질 18대 총선에서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인 여부를 물은 결과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56.4%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물갈이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20.3%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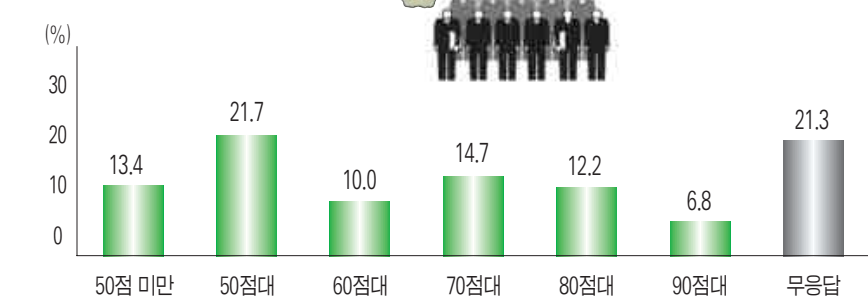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은 광주가 62.7%, 전남은 52.1%로 광주가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미만에서 61.0~62.9%,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74.2%)와 민주노동당 지지자(6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100점 만점)에 대해서는 35.1%(50점 미만 13.4%+50점대 21.7%)가 60점 미만의 낙제점을 줬다. 중간 점수인 60점 이상~80점 미만은 24.7%(60점대 10.0%+70점대 14.7%)였다. 70점 미만까지 낮은 점수에 포함시킬 경우 이에 해당하는 평가가 45.1%에 달했다. ‘우수’로 볼 수 있는 80점 이상은 19.0%였고 이 가운데 90점 이상으로 ‘최우수 A등급’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는 불과 6.8%에 그쳤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낮은 평가가 물갈이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투표할 후보의 소속 정당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25.0%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는 17대 대선에서 신당 정동영 후보가 광주·전남에서 얻은 득표율(78.6%)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이며, 정당지지도(31.8%)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대선과 총선의 표심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대선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수



유권자 10명중 4명은 “의정활동 형편없다” 평가 “지지 정당없다” 응답 많아 호남 쟁탈전 격화될 듯

에 실망하고 고립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총선에서는 태도를 바꿀 수 있음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부동층 및 무응답층이 48.5%에 달해 방황하는 표심을 반영했다.

신당에 이어 민주당 7.4%, 한나라당 7.2%, 민주노동당 6.1% 순으로 이들 3개 정당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광주·전남을 지지기반으로 삼아왔던 민주당간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여기에는 대선 과정에서 범여권 통합을 외면한 채 독자행보를 해온 이인제 후보와 당 지도부에 대한 냉랭한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창조한국당은 2.7%, 기타 정당은 2.0%를 각각 얻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총선 과정에서 각 정당의 ‘호남 쟁탈전’이 격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지역민심을 사로잡는 뚜렷한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물갈이 여론까지 높기 때문이다. 호남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신당은 바다 표심의 심상찮은 변화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정치적 메카’인 호남을 놓칠 경우 총선 참패는 불보듯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선에서 서울과 수도권 유권자들이 개혁진영에 등을 돌려 신당내 입후보 예정자들 가운데 호남에 연고를 가진 인사들이 대거 ‘남행열차’를 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호남 쟁탈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나라당도 이번 총선에서 호남 교두보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다할 태세다. 민주당 일부 세력을 포용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범여권 각 정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과반인 51.0%가 ‘모두 통합해 최소한의 견제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 대선 이후에도 지역민들의 단일대오 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까지는 필요없고 각 정당 자체에서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36.3%였다.

차기 대통령에 거는 기대

이명박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58.6%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꼽아 경제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늘어선문제는 8.3%, 사회양극화 해소 7.4%, 균형발전 5.6%, 교육문제 5.3%, 국민통합 4.8% 순으로 경제분야 이외에는 그리 큰 요구를 드러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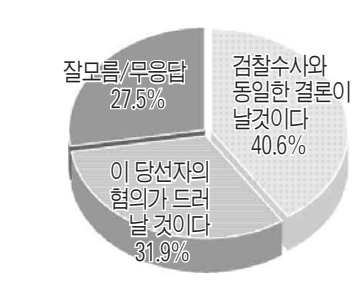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은 40대(68.3%), 광주 거주자(65.5%), 자영업(70.8%)과 가정주부(64.9%), 보수적 정치성향계층(67.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기대가 큰 이 당선자의 공약으로도 41.3%가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는 특히 취업을 앞둔 학생층(65.5%)에서 높았다. 사교육비 절반 감축은 14.3%, 세금부담 완화는 11.6%, 약성농가부채 동결 및 장기분할 상환은 7.5%, 주택공급 확대는 6.5%, 한반도 대운하는 3.0%를 각각 차지했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경제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도 역시 ‘신규 일자리 창출’(42.4%)이었다. 중소기업 살리기는 18.4%, 부동산 문제 10.1%, 신용불량자 구제 7.3%, 기업 규제 완화 6.0%, 노사문화 개혁 4.4%, 공기업 민영화는 3.1%를 각각 얻었다.

3개 항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한결같이 ‘일자리 창출’로 모아진 것은 실업난 해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절박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실업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고, 경제살리기 1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내걸었다. 또한 7% 경제성장 목표로 매년 6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BBK 이명박 특검법 수사 결과 전망



이명박 당선자가 풀어야 할 과제 1순위 “일자리 창출” 총선 찍고 싶은 후보 정당, 신당>민주>한나라>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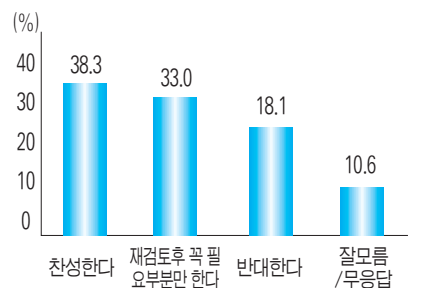
실업과 일자리 부족사태를 풀겠다고 주장해왔다. 분배 보다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둔 이 당선자가 이같은 요구를 얼마나 해소해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당선자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72.3%가 ‘잘해나갈 것이다’고 응답,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다’는 10.8%에 그쳤다.

이 당선자가 호남지역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영산강 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이 38.3%, ‘재검토 후 필요한 부분만 해야 한다’가 33.0%, ‘반대’의견은 18.1%로 조사됐다. ‘모르겠다’는 유보층은 10.6%였다.

이 당선자의 BBK 추가조사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와 동일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40.6%로 ‘이 당선자의 혐의가 드러날 것’(3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민적 의혹은 크지만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시점에서 특검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검찰 수사

영산강 운하건설 찬반



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정당 지지도

대통합민주신당이 31.8%를 얻어 가장 높았고 한나라당 12.1%, 민주당 9.0%, 민주노동당 5.9%, 창조한국당 2.9%, 국민중심당 0.3% 순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무당층은 38.1%에 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지지도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9-10일 광주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 6차 조사 때보다 3.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0.2% 상승해 지난 2006년 12월 광주일보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한 이후 10% 초반대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대선 직전 잇따라 탈당 행렬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이 대선 득표율은 물론 정당지지도에서도 광주·전남 제2당의 위치를 공고히 해나가는 양상이다.